

현대아산의 위기와 정부 거버넌스의 위기

채진원*

I. 안타까운 상황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12년간 공들여온 금강산 관광사업이 파국 위기를 맞고 있어서 안타깝다. 최근 북측의 금강산관광지구 내 부동산 동결 조치에 따른 결과다. 사건의 발단은 아래와 같다.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지면서 관광은 무기한 중단되었고 남북관계는 경색되었다. 2009년 8월 현정은 회장이 어렵게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금강산관광 재개 약속을 얻어내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근본적인 재발방지 등의 조치를 북측에 요구하면서 상황이 더 이상 협력분위기로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북측은 부동산 동결조치라는 극단책으로 맞섰다.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은 지난 4월 21일 “현대가 열어놓은 남과 북의 민족 화해 사업인 금강산과 개성관광 사업은 계속돼야 한다”며 조속한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그리고 현대아산은 “금강산관광은 남북화해와 협력, 한반도의 평화 증진에 기여해 온 만큼 결코 그 길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이런 현 회장의 바램과 현대아산의 속 타는 마음을 귀

* 경희대학교

담아 들어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현대아산은 현재 지난 2008년 7월 관광 중단으로 인한 매출 손실이 2천 3백억 원 이상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개성관광 중단으로 인한 손실까지 치면 3천억 원 가까이 손실을 보는 등 최악의 경영악화상태에 빠져있다. 이 과정에서 현대아산은 이미 기존 1천 84명이던 직원을 384명으로 줄였으며 임직원들의 급여를 일부 유보하거나 삭감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II. 현대아산의 기업정신과 정체성

일반적으로 기업의 목적은 사적인 이윤추구라고 알려져 있다. 물론 기업들은 장기적 이익을 위해 단기적 이익과 리스크를 감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아산이라는 기업이 계속되는 적자와 불확실성속에서 손해를 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남북정부에게 애걸하며 금강산 사업에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필자는 다른 것을 떠나서 정주영 회장의 남북통일에 대한 철학과 그의 유지가 반영된 기업철학 그리고 이것들을 계승하기 위한 현대 현정은 회장 및 임직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정신 및 이것의 일체화된 정체성이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싶다. 이러한 정주영 회장의 철학은 현대아산의 비즈니스 방향에 대해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 이러한 정 회장의 철학은 작고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그 정신적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현대아산이 금강산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돈과 이윤 때문이라고 폄하된다고 하더라도, 남북교류와 협력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함께 파트너십을 형성했으며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정권도 꺼려하는 일을 민간차원의 영리기업이 홀로 어렵게 대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을 일종의 ‘현대아산의 거버넌스’라고 적극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경협외의 하나로써 단순한 기업이익과 사적인 차원을 넘어 남북한이라는 적대적인 국가공동체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교류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한반도 긴장 관계를 해소시키는 커뮤니케이션 사업이라고 생각된다. 한마디로,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이 서로 적대적인 정체성을 약화시키면서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마중물과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기에 빠진 현대아산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존립위기를 바라보는 내 마음은 한마디로 ‘현대아산 지못미’다. 현대아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현대아산이 잘되라고 촛불이라도 들고 싶은 심정이다.

필자가 돈이라도 많고 주식이라도 하는 성격이라면, 현대 아산의 주식을 사주고 싶은 마음이다. 현정은 현대 회장과 현대아산이 바라는 대로 남북한 정부가 적대적인 조치를 중단하고 적극적인 대화와 신뢰회복에 나서줬으면 정말 좋겠다. 내가 어쩌다가 현대아산의 금강산 사업을 응원(?)하는 애국자(?)가 되었단 말인가?

지난해 8월 전격 단행했던 방북과 같은 승부수에서 드러났듯이, 현정은 회장의 따뜻하고 똑심 있는 리더십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번 위기에서도 그 리더십이 다시 한 번 빛났으면 좋겠다. 필자는 20년 전만 하더라도 현대그룹이 아닌 현대 폴리엣 노동자를 응원했었다. 이제는 금강산 관광으로 표현되고 있는 남북경협과 남북경협의 아주 중요한 행위자인 현대아산을 응원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그동안 내 마음이 많이 변한 탓일 것이다.

III. 지구화 시대 거버넌스의 필요성

그동안 금강산 관광사업이 가능했던 이유는 정부와 현대그룹간에 남북교류라는 목표와 의미를 공유하는 신뢰의 거버넌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거

버넌스(governance) 개념은 이제 막 형성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통일되어 있지 않다. 거버넌스에 대한 보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정의는 국가,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단체, 초국가적 지역기구, 초국가적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와 연대, 소통과 신뢰를 중심으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공동의 문제해결과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협력적 공치양식’(mode of cooperative-public governing) 또는 ‘조종을 통한 공동의 목표 추구 과정’(process of steering and pursuing common goals)이라고 할 수 있다.

지구화, 후기산업화, 정보화, 탈냉전 등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쿠이만(Kooiman)은 사회의 복잡성(complexity)으로 인한 혼돈과 역동성(dynamics)으로 인한 방향감각 상실, 다양성(diversity) 증대로 인한 분열에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coordination), 조종(steering), 조절(regulation)이라는 새로운 조정양식의 필요성이 거버넌스 논의를 불러왔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그는 지구화 등으로 표현되는 전환기적 시대상황에 부합하는 대안적 거버넌스 모델로 ‘계층제 거버넌스’(hierarchical governance), ‘자율 거버넌스’(self-governance), ‘협동 거버넌스’(co-governance)를 제시하였다.

또한 쿠이만은 거버넌스의 핵심을 정부와 사회(시장,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즉, 공동조종, 공동관리, 공동생산으로 표현되는 상호작용의 새로운 패턴이라고 보았다. 다양하고 동태적이며 복잡한 사회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시장과 시민사회의 행위자들이 정부의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되었고, 이러한 정부와 민간의 공동 상호작용이 불가피하고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IV. 현대아산의 위기, 정부 거버넌스의 위기

이명박 정부 하에서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이 위태롭게 되었다. 저승에서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김대중 전대통령, 노무현 전대통령, 정주영 전회장의 심정은 어떨까? 아마도 많이 착잡할 것이고, 아쉬워 할 것이다. 특히, 저승에 있는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북측 지도부에 박왕자씨 피살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를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금강산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투트랙 대화’(two-track talk)를 노련하게 주문했을 지도 모른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전대통령은 햇볕정책의 정착과 계승을 위해 현대 정주영 회장과 현대그룹 및 협력업체들과 맺었던 파트너십 그리고 함께 공유했던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의미를 추억하며 그때를 아쉬워 할 것이다. 아울러 정주영 회장은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해 수많은 위협과 불확실성을 감내해야 하는 자신과 현대그룹을 위해 법·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이전정부의 술선수범이 그리울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현대아산의 경영상태는 어렵고 금강산 사업은 존폐위기에 처해 있다. 마찬가지로 정부와 기업간 거버넌스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앞에서 쿠이만이 말한 대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까지는 두 행위자간 민관협력에 따른 ‘협동 거버넌스’가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전 정부들이 이념과 좌우파를 떠나 오랜 고민 끝에 활용해 왔던 다양한 거버넌스의 틀을 버리고 ‘거버먼트’의 틀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거버먼트의 틀로 회귀하는 국정운영의 방식에 대해 시민사회의 비판과 적대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가장 대표적인 비판적 예가 촛불시위다.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가 금강산 관광사업에서도 거버넌스의 틀을 버리고 거버먼트로 회귀하는 동안 현대아산은 이전의 ‘협동 거버넌스’의 틀에서 벗어나 하는 수 없이 기업 홀로 열망하며 버티는 ‘자율 거버넌스’로 전환하였다. 언제까지 이렇게 정부의 도움과 협력없이 홀로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만약 현

대아산과 금강산 관광이 무너지면 이후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남북교류를 중단시켰다는 이명박 정부의 책임은 면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은 지금보다 더욱 힘들어 질 것이다. 결국 현대아산 금강산사업의 위기는 이명박정부 거버넌스 위기의 상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간의 경계(border)를 시발로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진보, 보수 등 모든 차이와 이념의 경계가 얽어지는 지구화시대에 적과 동지 그리고 선과 악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일방적이고 배타적인 국정운영방식은 시민사회의 잔매와 여야교착 및 파행을 견디기 힘들다. 이미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배타적 우월주의와 일방주의에 대한 글로벌 시민사회의 잔매는 지구촌 반미주의의 등장을 계기로 부시와 네오콘들을 권좌에서 물러나게 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이것을 지혜롭게 역지사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언론과 정당 및 정부는 오는 6.2 지방선거에서 득표전략을 위한 정치공학으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여론을 조작하거나 선거가 아닌 폭로-기소로 이어지는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를 동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9.11 테러 이후 아프카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침공으로 무리하게 연결시켜 선거의 득표전략으로 동원하려고 했던 네오콘과 부시의 정치공학과 여론조작을 흉내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와 안보이슈가 지배하는 순간 지방선거의 핵심인 ‘생활이슈’와 ‘생활정치’는 천안함 못지않게 침몰할 것이고, 유권자들의 투표율과 정치신뢰도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타격을 받아 동반 침몰할 것이다.